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3. 10. 23.
No. 93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차희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주요 내용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지역의 27개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 분석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실태,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용 중인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나,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운영으로 체감도가 낮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례 발굴 및 추가 곤란 지적

•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제안을 취합·분석(총 257건)

-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내용 분석, 생애주기별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중점과제 도출

정책방안

❶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 및 특례 방향

- 지방소멸 대응목표와 연동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안

- 기업 차원에서는 특구제도의 운영 개선으로 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 개선, ② 지역 향토·특화산업진흥 특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개인의 지방 이주·정주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결과 ③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④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⑤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증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제안

❷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실행방안

- 지역 주도의 상향식 특구제도 개편,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등

01.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발전과 규제방식 변화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발전 메커니즘과 영향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은 안정된 기술, 인구성장에 근거한 대량 생산과 소비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전제하였으나 이후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 인구감소 등으로 이론적 설명력을 잃게 됨

- 지역 발전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인 사람(인구)이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은 설명력을 잃었고, 대안적 지역발전이론도 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산체제를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은 인구의 절대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을 겪으면서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

- 일본 국토교통성(2015)에 의하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적 영향으로 세수 감소·행정 서비스 저하·지역 인프라 노후화(40.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생활 서비스 축소(20.0%), 주민조직·담당자 등 지역인재 부족(18.3%), 공공교통 철수·축소(8.0%), 빈집·빈 점포·경작방치토지의 증가(6.3%), 학교 통폐합·폐교(5.1%)순으로 응답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초래할 지역적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방 인구감소는 ① 지역경제 및 산업·일자리 기반을 위축시키고, ② 정주기반 와해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초래하며, ③ 주민의 생활 불편 초래 및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④ 국가소멸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인구감소지역을 둘러싼 여건과 규제방식의 변화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인구성장시대의 지역 발전 정책수단을 계속 운용하기가 곤란해졌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걸맞은 정책수단과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

- 인구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성장사회 기조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사회적 질(quality)을 중시하는 성숙사회로 전환하면서(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규제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
- 성장사회와 성숙사회는 규제방식에도 차이가 있음. 예컨대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성장시대에 만들어진 규제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성장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제 가운데 성숙사회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획일적인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주도로 전환이 불가피

- 인구성장시대에는 인구규모나 연령이 주요 지원기준 및 규제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구감소시대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
- 인구감소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맞춤형 규제 개선 및 특례 적용여부를 시급히 검토할 필요

그림 1 시·군·구별 인구의 데드크로스 시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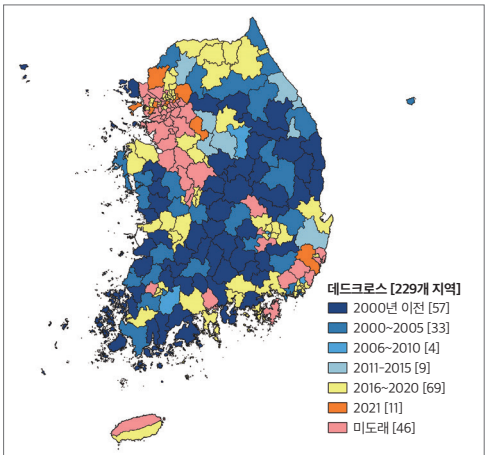


표 1 인구감소지역 현황(2022년)

구분	인구감소지역	비인구감소지역
인구(명)	4,840,438(9.4%)	46,598,600(90.6%)
면적(㎢)	59,660(59.4%)	40,784(40.7%)
인구밀도(명/㎢)	534.78	5,748.56
고령화율(%)	33.71	17.95
유소년비율(%)	7.89	11.83
청년인구(19~34세)비율(%)	13.3	20.6
전체 청년인구 대비 지역 청년인구 비중(100 기준, %)	6.3	93.7
빈집비율(%)	13.55	6.60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1.0	20.6
평균 재정자립도(%)	10.02	25.5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22년)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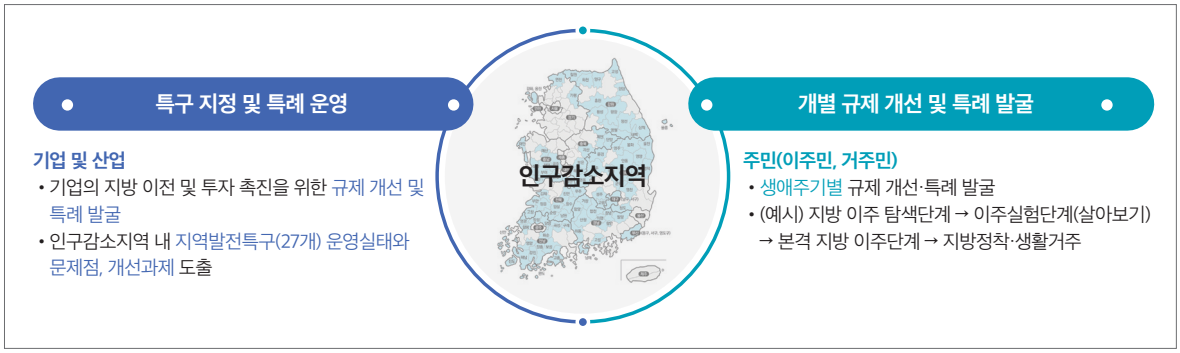
02.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조사목적과 범위·내용

인구감소지역의 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편·불합리를 초래하여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규제 개선수요 및 특례 발굴

- 지역 발전 목적의 특구 및 관련 특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 중앙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와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운영 중인 27개 지역발전특구의 운용실태와 적용 특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발굴 제안 조사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광역 11곳, 기초 89곳)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조사를 실시하여 취합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제안수 총 257건[1]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그림 2 조사범위와 분석내용



인구감소지역 내 27개 지역발전특구와 특례 운용 실태

중앙정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27개 특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규제특례 관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가장 많이 운영 중

- 인구감소지역 내 특구 중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치, 산업 육성 목적의 특구가 21개(78%)로 가장 많고, 지역문화 육성·향토 브랜드 개발 목적의 특구(4개), 낙후지역 지원 및 도시재생 목적의 특구(2개)순
  - 전남 영암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산학융합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기업도시가, 경북 영천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문화도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말산업특구 등 각각 8개의 특구가 지정·운영 중
  - 특구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순이고, 특구 가운데 78%(21개)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
  - 22개 특구가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규제특례 특구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는 ①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으로 체감 저조, ② 지역여건에 맞는 특례 추가 발굴과 적용 곤란, ③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애로를 고려한 규제 개선과 특례 필요, ④ 특구제도의 고도화 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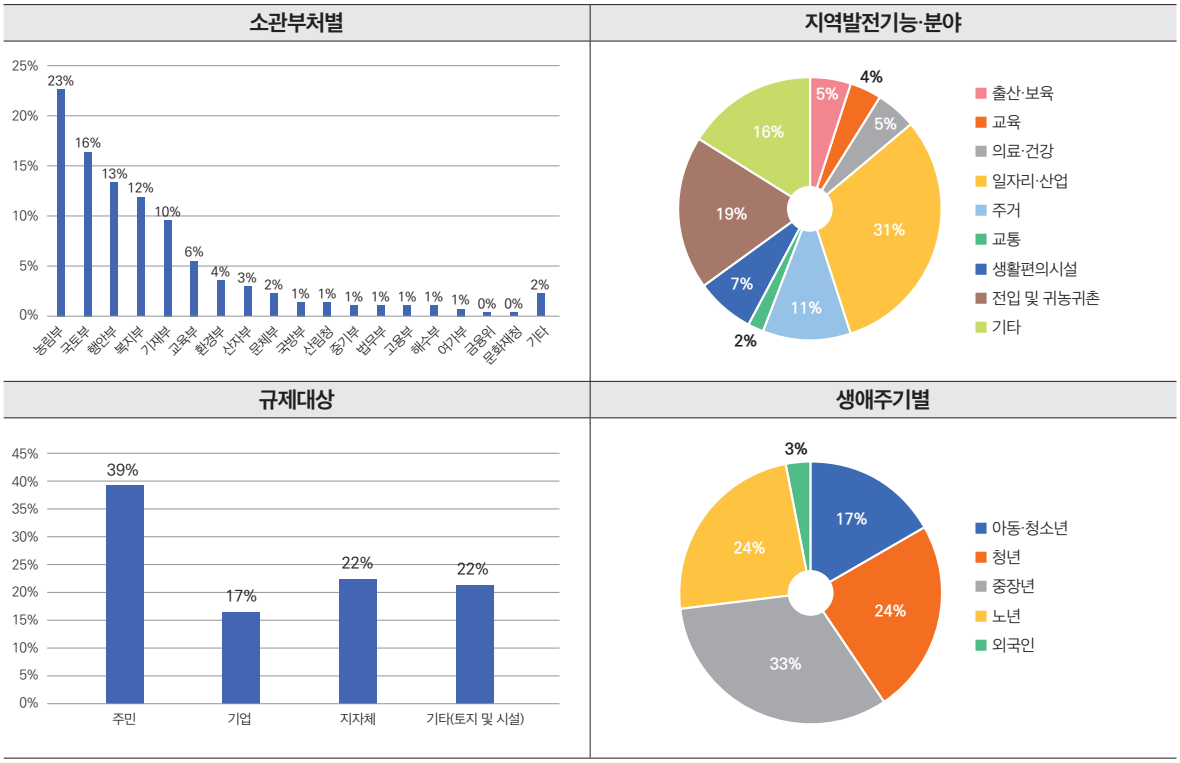
1) 본 연구의 일환으로 취합한 자료(149건) 이외에 2018년(55건), 2021년(20건), 2022년(44건)에 수행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 제안 중 11건이 법제화가 되어, 이를 제외한 총 257건이 분석대상임.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 종합 분석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제안

- (지역발전기능) '일자리 및 산업 진흥(31%)', '전입 및 귀농귀촌(19%)', 기타(16%), 주거(11%)순으로 나타남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인 것에 기인
- (규제대상) 주민생활 불편 개선 관련 특례(39%) 제안이 가장 많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33%), 노년(24%), 청년(24%), 아동·청소년(17%), 외국인(3%)순임

그림 3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종합



주: 1) 규제대상, 지역발전기능·분야, 생애주기 유형은 중복 처리함.
2) 정부부처, 행정기관의 명칭은 지면상 간략하게 표시하였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개선·특례 제안 분석 기반의 시사점과 검토방향 도출

- (생애주기 고려)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경비 보조/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청년은 귀농창업/직접일자리사업 특례, 중·장년은 후계농업경영인 자격기준/농지 임대차 규제/귀농·귀촌 관련, 노년은 두 지역 거주/경로당 이용 관련 특례 제안이 높음
- (지역특수성 고려) 농지, 산지, 섬, 산림 등 지역이 처한 입지 여하에 따라 규제 개선과 특례 요구
  * 예시: 강원도 양양군과 정선군(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완화), 충북 제천시와 옥천군(폐수배출시설 설치규제 완화)
- (지역다양성 고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동일 규제특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과정에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자체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수렴과 대응 필요
  * 예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워크숍(2023년 4월 4일) 결과, 규제특례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제시
- (중앙-지방 간 상시 협의) 중앙-지방 간 상시 협의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미비 등으로 지자체가 계속하여 동일한 규제 개선 및 특례를 제안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
  * 예시: 전남 강진군은 후계농업경영인 자격기준(연령 상향 제안)을 2018, 2021, 2023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제안
- (규제 개선 및 특례 체감도 제고) 개별적인 규제위주 개선과 특례 접근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목표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규제 개선 및 특례 발굴을 통해 체감도와 효과성 제고 필요

그림 4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키워드 분석

주: 지자체 대상의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257건)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03.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

중점과제의 도출과 규제 개선·특례 검토방향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크게 기업 및 일자리 확충, 생애주기별 지방 이주·정주 촉진과 관련하여 중점과제 도출 및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특례 방향 제시

- 개별 규제특례나 개선은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없으므로 지방소멸 대응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덩어리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가 필요

그림 5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 중점과제 도출

중점과제 1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 내 특구 가운데 기업 이전 및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1개(78%)의 특구가 운영 중
-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대표적인 규제특례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운영으로 체감률 저조, 규제특례의 상시 발굴과 추가 적용 어려움 등 한계

•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 지역 주도의 분권형 특구제도 개선: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특구제도로 개선 필요

표 2 지역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배경과 목적	• 정부가 견인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상향식 정책 •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주도성 확대,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게 만듦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장 친화형 정책		
주요 내용	세제혜택	세제혜택	특구 내 이전·투자재원 마련 단계
		특구 내 거주·경영단계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감면, 특구 개발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 규제(지역특구법)를 유예 및 면제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중앙정부의 신속한 규제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등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추가 규제혁신을 적용
	인력 양성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방대학 특성화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 참고.

- 기존 지역발전특구제도 개편 및 고도화: 인구감소지역 내 운영 중인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제도 개편 및 고도화

* 일본의 지역발전특구제도 고도화: 구조개혁특구 → 종합특구 → 국가전략특구

중점과제 2 지역 향토·특화산업진흥 특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향토·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특례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특례 및 메뉴판식 규제특례(129개), 특구당 평균 5.3개의 특례 적용
- 규제특례의 전국화와 일반화 곤란, 경직된 규제특례 운영과 추가 특례 적용 곤란으로 한계

•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 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고도화 모색, ②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발굴 및 상시적인 규제 검토·협의 프로세스 운영, ③ 규제특례의 전국화와 일반화, ④ 과감한 재정지원시책과 규제특례의 연계 강화, ⑤ 특구 관리체계의 합리화·고도화 추진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예시

- 인구감소지역의 전통주 주세율 감면 특례, 인구감소지역 전통시장의 지원기준 완화 특례, 인구감소지역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설치기준 특례, 수도권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고용 유지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 등

중점과제 3 은퇴자의 지방 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22년 고령화율 18%를 기록하면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율은 33.7%에 달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편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자나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을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현안 지역문제를 해소할 필요

•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 은퇴자나 중장년층의 지방 이주 촉진을 위해서는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 및 거주단계 등 단계별 규제 개선 및 특례 발굴·적용 필요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예시

- (이주 탐색단계) 귀농·귀촌인 지원자격기준(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 및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1가구 2주택 중과세기준 완화, 농어촌 빈집 관련 규제,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규제특례 적용으로 이주에 따른 추가 경제적 부담 완화
- (정착 및 거주단계)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면적기준, 식사 제공), 농지 임대차 규제 개선, 은퇴자 등의 두 지역 살기 관련 규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 및 생활 불편 해소

중점과제 4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정주 촉진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은 도시에 비해 높은 출산력으로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아동,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필요

•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방향

- ① 세대 조화 및 연령 통합형 정주 공간 조성, ②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편의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적극 발굴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예시

- (임신·출산·보육 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시범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 내 난임부부 지원 특례 등
- (교육 여건 개선) 폐교 활용 촉진 및 지역주민 활용 시 우대 적용 특례, 농어촌 특별전형 요건 완화 등
- (문화·관광 촉진) 문화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설립기준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특례 적용
- (의료·복지 기반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방문 진료 등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 (일자리 및 지역산업 진흥) 귀농귀촌 및 지역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해 농지임대차 특례,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주세율 개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자격기준 완화
- (주거·이동 촉진) 주택 신축 및 개·보수 철거 지원 특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운임 지원, 특수배송비 지원조건 완화 등 특례 조치 검토

중점과제 5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제도화 운용
-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 체류인구의 생활인구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

  *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비력 약화와 지역경제 위축 해소, 활력 증진을 위해 체류인구의 생활인구화 촉진

-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인구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안 예시

- (체류인구) 산지 인구 유입 활성화 규제 개선,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자 기준 완화 및 특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가능 업종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민 교통운임 지원 등
-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근무처 규제 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등

04.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실행방안

지역 주도의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 개편

1960년대부터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46개에 달하는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대부분 기업의 이전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특구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분권형 상향식 특구제도로 전면 개편 추진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특례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고,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전국 획일 적용문제 개선, 새로운 규제특례의 발굴과 적용을 위한 협의 절차 개선 필요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지역 주도의 상향식 규제특례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부여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현행 하향식 규제특례 발굴은 지역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필요
- 지역여건에 따라 규제특례의 자율적인 선택과 운영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일본은 2014년부터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제안모집제도를 활용 중, 특히 거수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 희망에 따라 권한 위임, 기능 이양 및 특례를 선택·적용하여 지역 주도성을 강화

표 3 일본의 제안모집제도와 '거수방식' 운용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도입 배경	• 제2차 분권개혁(2006~현재)의 일환으로 2014년에 도입(내각부 지방분권개혁추진실 소관)
도입 목적	• 지자체가 제도 개정을 직접 제안, 지역 발의에 기초한 상향식 분권개혁을 추진할 목적 • 지자체로의 사무 및 권한 이양, 규제 완화사항 등이 주요 제안대상
추진 현황	• 2014년 953건, 이후 매년 약 300건 제안. 초기에는 권한 이양이 많았으나 이후 규제 완화 제안이 80% 차지 • 분야별 제안 건수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의료·보건분야가 가장 많고, 농업·농지분야, 고용·노동분야의 순
추진 성과와 사례	• 과소지역의 비상근의사 진료소 관리자 인정(시마네현, 2019) • 과소지역의 택시 등 차량을 활용한 화물운송 겸업 허용(돗토리현, 2016) • 대기아동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면적기준의 탄력적 운용(오사카시, 2014) •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정 지자체로 이양(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2014) • 고향납세 기부금 세액공제 전자납부 가능(효고현 등, 2018) 등

자료: 지경배 202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규제특례 추가 발굴·법제화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축·운영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동 발굴 및 실행방안 모색 필요

- 중앙-지방협력회의 적극 활용 및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선 거버넌스 추진체계 운영,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특례 공동 발굴 및 중앙부처와 협의 채널 공동 운영

참고문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이정현. 202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제1회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발표자료. 6월 22일.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경배. 2023. 일본의 분권개혁 동향과 시사점. 정책톡톡 2023-22. 춘천: 강원연구원.
차미숙, 최예술, 조은주.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57호. 세종: 국토연구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23832 (2023년 10월 17일 검색).

※ 이 브리프는 "차미숙, 이차희, 조은주. 2023.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일부 요약·정리한 것임.

•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mscha@krihs.re.kr, 044-960-0190)
• **이차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cha0324@krihs.re.kr, 044-960-0229)
• **조은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ejcho@krihs.re.kr, 044-960-0255)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